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유치, 어떻게 볼 것인가?

# 시민단체 “의료이용 빈부 불균등 심화” 재경부 “경쟁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 내일신문 10월 26일 보도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을 유치하는 사업이 전면적 의료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나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동북아 병원’ 유치 사업은 전면적인 의료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의료비 상승에 따른 의료이용에 대한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민간보험 도입 등으로 현 건강보험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는 “경제특구내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전면적 의료시장 개방이 아니다”며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최고 수준의 외국병원 유치는 필수적이다”고 밝히며 사업 강행 의지를 확인했다.

◆ “한국의료 발전계획 세워야” = 권용진 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는 “전면적인 의료시장 개방은 우리도 반대하지만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설립은 이와 별건”이라고 규정하고 “외국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국내 의료계와 경쟁을 유발시켜 서로 발전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다.

권 이사는 또 “다만 한국의료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전략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동북아 병원 중심 전략만 있다”고 꼬집고 “국내 의료기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의료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단순한 선악 논리로 보는 것은

반대”라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도 내·외국인 차별철폐와 영리법인 허용 등의 전제조건이 수용되면 재정부 방침을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 **“의료계 스스로 서비스 질 높여야”** =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는 ‘말도 안된다’며 반박하고 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은 설비로 채워지는게 아니다”며 “우선 의료계가 스스로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서비스 질을 객관화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외국병원 유치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은 결국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보험수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민간보험 도입이 논의되어 국내 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 국장은 또 “인천경제특구를 시작으로 부산과 광양, 유성 등 전국 10여곳에 외국인대형병원이 들어서면 이같은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며 “재정부는 궁극적으로 의료시장 개방의 걸림돌을 이번 기회에 없애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준 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는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필리핀 등 외국 치대 졸업생들이 특구 내 외국병원을 통해 국내로 들어와 진료를 하면 면허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왕용 한의사협회 정책이사도 “한방병원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이번 법안은 의료개방 단초가 돼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 **500병상 규모 최고 수준 병원 유치** = 재정부는 이같은 의견대립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허용 등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재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외국인병원은 500병상 규모로 세계 유수의 우수 인력과 설비를 갖추는 것. 재정부는 “이 정도 규모가 국내 의료 체계를 흔들 수 없다”며 “경제특구법에 따른 개방이므로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권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허용은 반대한다”며 “좀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4

〈범현주 기자〉

## 내일신문 ‘경제특구 외국병원 유치 쟁점’ 보도에 대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 유치에 대해 재경부는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최고수준의 외국병원 유치는 필수적이며 500병상 규모의 최고수준의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시민단체는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유치는 전면적인 의료시장 개방으로 이어지고, 의료비 상승에 따른 의료이용에 대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민간보험 도입 등으로 건강보험체제와 의료체제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치과의사협회도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필리핀 등 외국 치대 졸업생들이 외국병원을 통해 진료하게 됨으로써 면허문제가 발생하여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의사협회 역시 의료시장 개방의 단초가 되어 의료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의료시장 개방과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허용은 별개의 것이며 외국병원이 경제특구 내에 들어오는 것은 국내 의료계와 경쟁을 유발시켜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한국 의료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전략과 국내 의료기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의료발전계획 작성을 조건부로 하여 외국병원의 유치에 찬성하고 있다.

### 〈대한병원협회의 입장〉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투자 병원의 유치는 물론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하여 조건부로 찬성한다. 여기서 조건부란 외국병원과 국내병원 간 차별을 철폐하여 우리나라 병원에도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여 경제특구 내 진출과 외국병원에 제공하게 될 혜택을 동일하게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한병원협회의 역차별의 철폐 요구에는 몇 가지 주요 이유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장기적으로 의료시장의 개방에 대처하여 우리나라 병원의 해외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는 것이다. 외국병원의 국내시장 진입이나 우리나라 병원의 외국시장 진출은 영리법인 병원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외국병원의 국내시장 진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외국병원과 경쟁할 뿐만 아니라 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는 향후 성장산업으로서 병원산업의 육성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되어 있는 현실에서 타당성이 클 뿐만 아니라 경제특구는 우리나라 병원이 외국병원과 최초로 경쟁을 해보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험장이 될 수 있는 입지적 중요성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 민간병원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낮은 경쟁력의 문제를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간병원이 90%를 점유하는데, 법인형태를 취하면 모두가 지분이 인정되지 않고 청산시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비영리병원이 된다. 그럼에도 민간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없다. 자본확충 방안도 없다. 병원은 자본·기술·경영 등이 취약하여 경쟁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병원체계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민간병원을 3개 범주로 분류하여 설립자가 설립 목적에 따라 법인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법인형태의 병원을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으로 구분하여 ① 현행과 같이 지분이 인정되지 않는 공익성이 강한 비영리병원, ② 지분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병원, ③ 영리법인 병원으로 구분한다.

지분이 인정되지 않는 비영리법인 병원의 대부분은 미국의 community hospitals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공공병원에 준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비영리법인 병원의 일부는 일본의 경우처럼 지분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 자본확충을 용이케 하자는 것이다. 한편, 영리법인 병원은 기업성을 강화하여 틈새시장에서 주민의 다양하고 높아지는 의료의 수요에 대응케 한다. 이들 3개 범주의 각기 다른 법인병원들이 경쟁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민간병원은 각기 설립목적이 있고 이윤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에 환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들 민간병원이 본래 설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민간병원이 90%를 점유하는 특이한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은 민간병원체계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확실하고 효과적 정책방향이 될 수 있고, 병원을 산업으로 보고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과도 부합한다. 이러한 장단기 전망 하에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허용과 내국인 진료의 허용에 찬성하고, 우리나라 영리법인 병원의 경제특구 내 진출을 의료법을 개정하여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병원협회의 입장이다.

###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에 대하여〉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경제특구 내에 외국인병원의 유치는 전면적인 의료시장의 개방으로 이어진다는 문제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의료시장 개방은 WTO체제 하에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의거하여 국가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정해진다. 협상의 형태는 시장개방 요구안(request list)을 접수한 후에 이에 대한 협상을 거쳐 양허안(offer list)을 작성하게 되는데, 특히 양허안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등 실정을 감안하여 거부 또는 단계적으로 개방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유치**는 **우리나라 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정부가 외국병원을 선별 유치하는 것으로서 의료시장 개방과는 성격 자체가 전혀 다르고 연관성도 없다.**

외국병원의 유치가 의료이용의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건강보험체계 및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우려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 또한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빈부격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소득층, 농어민,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격차인데 이들 문제는 현재도 심각하다. 이들 격차의 해소는 정부의 책임이며 외국병원의 유치나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됨으로써 더욱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 기회에 향후 더욱 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체계나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견해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오히려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과 민간병원체계의 구조적 개혁은 우리나라 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민의 의료이용 향상, 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004